

## ‘2천억 예산 삭감’에 광주시-의회 정면 충돌

“화풀이성 vs 무력화” 시-의회 양보없는 ‘치킨 게임’  
 시 “민원성 쪽지에산 없애야” vs 의회 “심의권 존중해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본 예산을 놓고 공개적으로 정면 충돌했다.

▶관련기사 3면

집행부인 시는 ‘꼭 필요한 사업’을 포함해 20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이른바 쪽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데 따른 화풀이성 심의”라고 반발했고, 의회는 상임위에서 실·국장 등의를 거쳐 증액된 예산마저도 부동의된 데 대해 “상임위 무력화”라고 거세게 반발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심의를

거쳐 상정한 7조1102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광주시가 당초 제출한 29개 실·국 총예산안(7조2535억원)에서 2089억8200만원, 비율로는 2.9% 삭감했다.

이를 두고 강기정 시장은 “심의권 남용”, “화풀이성 삭감”이라고 반발한 뒤 “삭감의 책임은 온전히 의회에 있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본회의장에서 작심한 듯 공개 비판했다.

이에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장의 독선과 아집이 부른 참사로, 상

임위를 무력화시키거나 시의원들의 고뇌에 찬 결단을 폄하해선 안된다”고 맞받아쳤다.

집행부는 시급한 현안사업비 삭감에, 시의회는 (쪽지 예산 등) 상임위 증액예산에 대한 시장의 부동의에 발끈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가 상임위 삭감 후 예결위에서 ‘부활’을 요청한 사업은 모두 17건에 184억 원 상당. 광주송정역~광주역 셔틀열차 운영비 15억 원과 공영 무인자전거 ‘타랑개’ 관련 4개 사업 예산 4억 9800만 원, 비엔날레 관련 예산 50억 원, 3대 창업패키지 일자리사업(창업패키지, 유니콘육성 프로그램 운영,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45억 원 등이다.

이 중 셔틀열차, 타랑개, 비엔날레

관련 예산 49억 여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 들여 최종 반영됐고, 나머지 13건 135억 원 상당은 미반영됐다.

의회가 예결위 단계에서 시에 요구한 사업은 자치구 민원성 도로 개설사업 8건을 포함해 모두 109건. 시는 “이중 31건은 협의를 통해 증액하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78건 가운데 70건은 증액을 동의해 결국 8건만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시와의 조율 실패로 결국엔 109건 모두 미반영(삭감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4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실·국장들이 증액에 동의한 인권을마을 조성고 숲은관광지 스톨 운영, 창업테스트베드 실증지원 등 18건에 12억7600만 원을 시장이 부동의하면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

다”는 입장이다.

시와 의회 모두 증액 요청한 사업 전체 반영을 원했으나 시는 시장이 부동의 권한을, 의회는 삭감 권한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요구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모두 틀어지면서 갈등이 표면화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제라도 꼭 바뀌어야 할 관행”이라며 ‘쪽지 예산’에 제동을 걸었고, 시의회는 “심의 권한 침해이자 상임위 무력화 시도”라며 시의 ‘쪽지예산’ 대부분을 잘라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의회 삭감 권한이 마주오는 열차 마냥 정면 충돌한 형국으로, 민선8기 광주시와 제9대 의회가 작나라하게 표출된 갈등 국면을 대화와 추경 예산 등을 통해 순조롭게 풀어나갈 지 ‘치킨게임’이 장기화될 지 지역 정·관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도기 기자

## “광주 군 공항 이전, 정부 적극 나서야”

“6년째 답보, 이전 후보지 선정·특별법 제정 촉구”

6년째 답보 상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시민협의회가 조속한 이전 후보지 선정을 촉구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 성과보고·대정부 촉구대회를 열고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를 하루빨리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광주시민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심에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입으면서 국가 안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2016년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지만 대구·수원과 달리 광주는 현재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광주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돼 조속한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 11월 2일 송갑석 국회의원과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 법안은 국가가 주도해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재정으로 원 사업 시 기부 대양어 부족분과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단지, 이전 지역 지원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총 5조 7480억 원을 들여 종전 부지(8.2km<sup>2</sup>, 248만평)를 개발한 뒤 수익금으로 15.3km<sup>2</sup>(463만평) 규모의 새 공항을 짓는 ‘기부 대양어 방식’ 프로젝트다.

/조일상 기자

전남 3개사와 1 조원 투자협약 2면

박지원, 검찰 소환 3면

내년 공사가격 14년만에 하락 4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14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성과보고·대정부 촉구대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뉴시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수사 11개월 만에 종료...21명 송치 책임 규명·비위 수사도 마무리

경찰이 사상자 6명을 낸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1개월 만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원인이 된 과실 책임을 규명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지 매입·업체 선정 관련 비위까지 밝혀내 총 21명을 검찰로 넘겼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HDC화정아이파크 신축 사업 과정에서 토지 미등기 매입·업체 선정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토지매입업체 A사 임직원 2명, 철거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 임원 1명은 화정아이파크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매수자가 바뀌었는데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전적 편익을 제공받아 챙겨 배임수증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 임직원 중 1명과 철거업체 관계자 2명 등 3명도 금전 비위에 연루돼 배임수증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HDC 화정아이파크 수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업체 미등기 전매 행위, 철거업체 선정 비리 등 구조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A사는 해당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부지(23필지) 매입 계약을 추진하다, HDC현대산업개발 계열 부동산 개발사에 시행사 자격을 넘겼다.

이에 따라 토지를 사들이는 매수자가 A사에서 HDC계열사로 바뀌었는데도 이에 따른 매수자 변경 절차와 부동산 등기 이전 등을 하지 않았다.

A사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매수자를 바꾸든지, 직접 부동산 등기를 한 뒤 HDC 계열사에 이전해야 했으나 같은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권형안 기자

**알림**  
 본보 지역 주재기자 모집  
 ▶모집분야  
 여수시·고흥군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축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